



NARS 현안분석

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하혜영

- ① 일본 정부가 2024년에 10년간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 성과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목표한 수준의 인구 증가 달성과 도쿄권 일극 현상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음
- ② 이에 2025년 6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이 유지·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5개년(2025~2029년)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을 발표함
- ③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② 청년과 여성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③ 대안적 인구정책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④ 지역 간 광역 연계를 통한 경제·생활권을 확대해야 함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Japan's Regional Revitalization 2.0 premised on a shrinking society



I 일본 인구 위기, 지방창생 정책의 도입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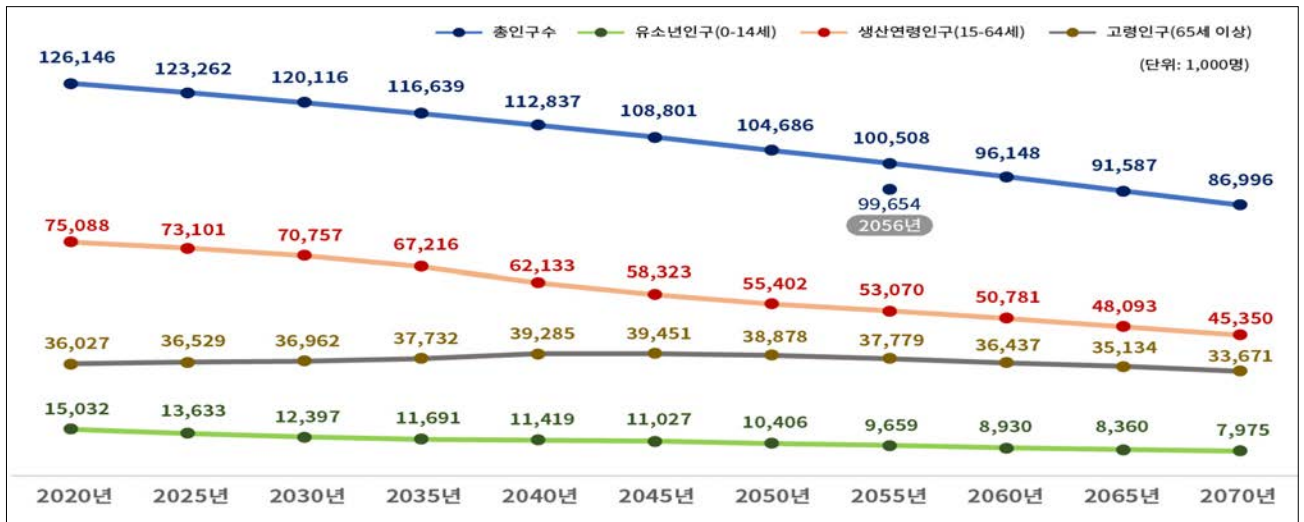
일본의 인구위기

“ 2070년 일본 인구는 2020년 대비 약 31% 감소 전망, 고령인구는 39%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서 총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따른 총인구는 1억 2,433만 690명이며, 이 중에서 일본인 주민은 1억 2,065만 3,227명(97.04%)이고, 외국인 주민은 367만 7,463명(2.96%)이다. 일본인 인구는 1년 전보다 약 90만 8천 명이 감소하여, 2009년을 정점으로 1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주민은 전년 대비 35만 4천 명이 증가하여, 외국인 주민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¹⁾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 1.76명, 1995년 1.42명, 2005년 1.26명에서 2021년 1.30명, 2022년 1.26명, 2023년 1.20명, 2024년 1.15명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²⁾

일본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0년 1억 2,614만 명에서 2056년부터는 1억 명 미만으로 하락해서 9,965만 명, 2070년은 8,69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³⁾ 2020년 대비 2070년 인구 증감율의 경우 총인구는 -31.04%, 유소년인구(0~14세)는 -46.95%, 생산연령인구(15~64세) -39.6%, 고령인구(65세 이상) -6.54%로 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고령인구 감소 폭이 가장 작는데, 고령화 비중은 2020년 28.6%에서 2070년은 38.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일본 장래추계인구 현황(2020~2070년)



※ 주: 해당 수치는 출생 중간치(사망 중간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함
 ※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 「人口問題研究資料」 第347号, 2023, p.139.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

1) 総務省,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令和7年1月1日現在)」, 2025, pp.1-2.
 2) 厚生労働省, 「令和6年(2024)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2025, p.6.
 3)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서 2020년 인구조사에서 확인된 인구를 바탕으로 장래추계인구 추정치를 2023년 4월 26일에 발표했다. 해당 사이트(https://www.ipss.go.jp/pp-zenoku/ku/j/zenoku2023/pp_zenoku2023.asp)에서 공개하는 장래추계인구 통계를 활용해 [그림1]을 작성했다.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도입과 변화

“

일본은 지역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 현상을 완화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지방창생이란 지역 활성화 정책을 도입

”

“

10년 간 추진된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2025년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정하고, 5개년 지방창생 종합전략을 발표

”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 현상을 시정하고자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도입하였다. 지방창생 정책은 2014년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에서 시작된 국가 차원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다. 같은 해 5월 일본창성회의⁴⁾는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자치단체 1,727개 중 896개가 소멸하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향후 30년 이내 고령화와 20~39세 여성 인구 감소로 대부분의 지방 사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발간하였고,⁵⁾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관련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이하 지방창생종합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창생종합전략은 마을·사람·일지리의 창생과 이들 간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⁶⁾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이하 지방창생본부)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했다.

지방창생 정책의 추진 연혁을 보면, 2014년 12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이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이후 성과 점검 및 보완 과제를 반영해 2019년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024년)」이 마련되었다. 2022년에는 지방창생 정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2027년)」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추진된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지방창생 1.0’으로 불린다.

2024년 10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⁷⁾은 그간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 창생본부’를 설치했고, 2025년 6월 13일에는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내각에서 의결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⁸⁾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였고,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지방창생 2.0 구상을 기본적으로 승계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전 내각이 설치한 기관은 폐지하고, 2025년 11월 ‘지역미래전략본부’로 개편하였다. 같은 해 12월 23일 5개년(2025~2029년)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⁹⁾을 발표하였다. 2026년 여름에는 ‘강한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전체 전략으로서 「지역미래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¹⁰⁾

4) 일본창성회의(日本創成会議)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1년 5월 일본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발족된 민간자문 조직으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초대 좌장을 맡았다.

5) 増田寛也, 『地方消滅：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公新書, 2014.

6) 하혜영·김유정,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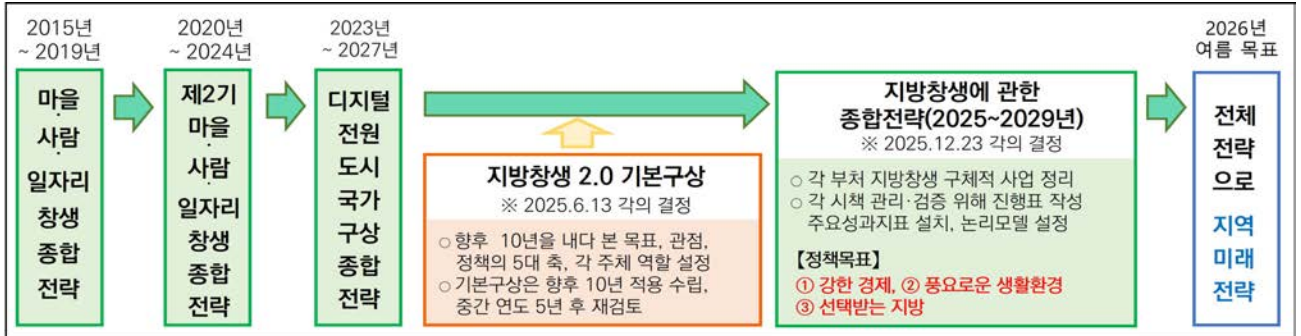
7)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2024년 10월 1일에 출범해서 2025년 10월 21일까지 구성되었다.

8)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정식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9) 전략의 전체 명칭은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지금까지의 지방창생 노력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진 전략」이다.

10) 内閣官房·内閣府, 「地域未来戦略の推進について」, 2026.

그림 2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주요 연혁



※ 자료: 内閣官房·内閣府, 「地域未来戦略の推進について」, 2026, p.2.

II

일본 지방창생 1.0 특징과 성과 및 한계

지방창생 1.0 정책의 특징

“ 지방창생 1.0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방 일자리 창출, 인구의 지방 분산, 젊은 세대 결혼·출산·육아 희망의 실현, 매력적인 지역의 조성

일본의 지방창생 1.0 시기에는 세 개의 지방창생종합전략이 추진되었다. 첫째, 정부는 2014년 12월 27일 「마을·사람·일자리창생종합전략(2015~2019년)」(이하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을 결정하였다.¹¹⁾ 이 전략의 장기비전은 2060년까지 총인구 1억 명 확보, 출산율 1.8 달성, 도쿄권 인구 집중을 시정하고, 2050년에는 실질 GDP 1.5~2.0%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의 기본 목표는 네 가지로, ①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②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을 형성하는 것,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 ④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① 정보(지역경제분석시스템 구축 등), ② 재정(지방창생교부금제도 등), ③ 인적(지방창생인재 지원제도 등) 측면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둘째, 일본 정부는 2019년 12월 20일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의 추진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될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024년)」(이하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을 결정하였다.¹³⁾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의 장기비전은 미래에도 활력이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도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에서는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에서 제기한 네 가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두 개의 횡단적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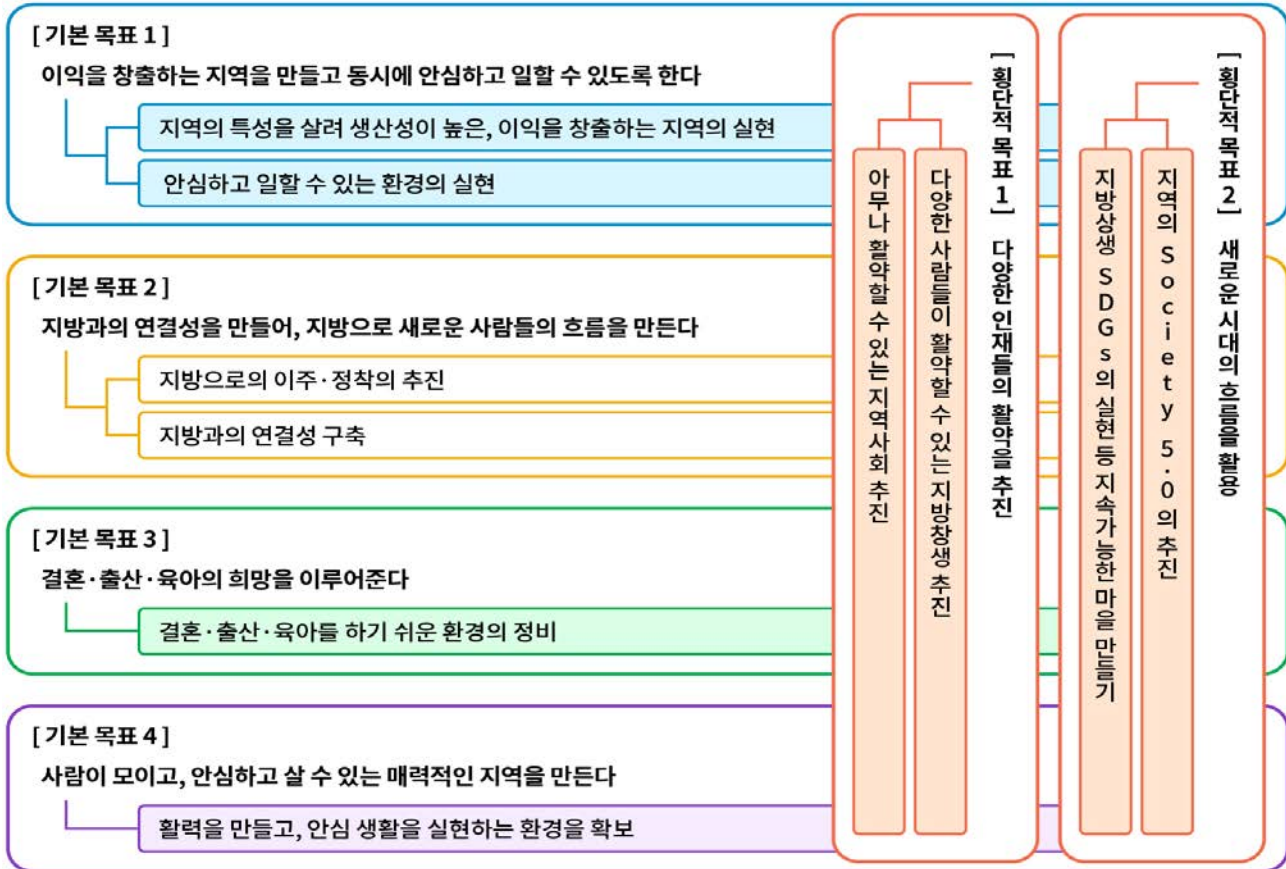
11) 内閣官房·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について」, 2014.

12)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제555호, 국토연구원, 2016.

13) 内閣官房·内閣府,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9.

14) 국토연구원 번역,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 2020-2024」, 2020, pp.60-61.

그림 3 일본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2024년)」 시책의 목표



※ 자료: 内閣官房·内閣府,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改訂版)』, 2020, p.34.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의 기본 목표로는 ① 이익을 창출하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과의 연결성을 만들어,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흐름을 만든다. ③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한다. ④ 사람들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든다. 그리고 횡단적 목표로는 ① 다양한 인재들의 활약 촉진과 ②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정보·재정·인적 지원 등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보완했는데, 특히 재정지원 수단으로 기업판 고향세를 도입하고, 관계인구(關係人口)¹⁵⁾란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셋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¹⁶⁾은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등 새로운 근로 방식의 보급을 계기로, 지방창생 정책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가구상을 추진하였다. 2022년 6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2027년)」을 수립했으며,¹⁷⁾ 2023년 12월에는 수정·보완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 개정판)」을 결정하였다.¹⁸⁾

15) 관계인구는 이주한 '정주인구'도 아니고, 관광을 온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總務省, 「關係人口」,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검색일: 2026.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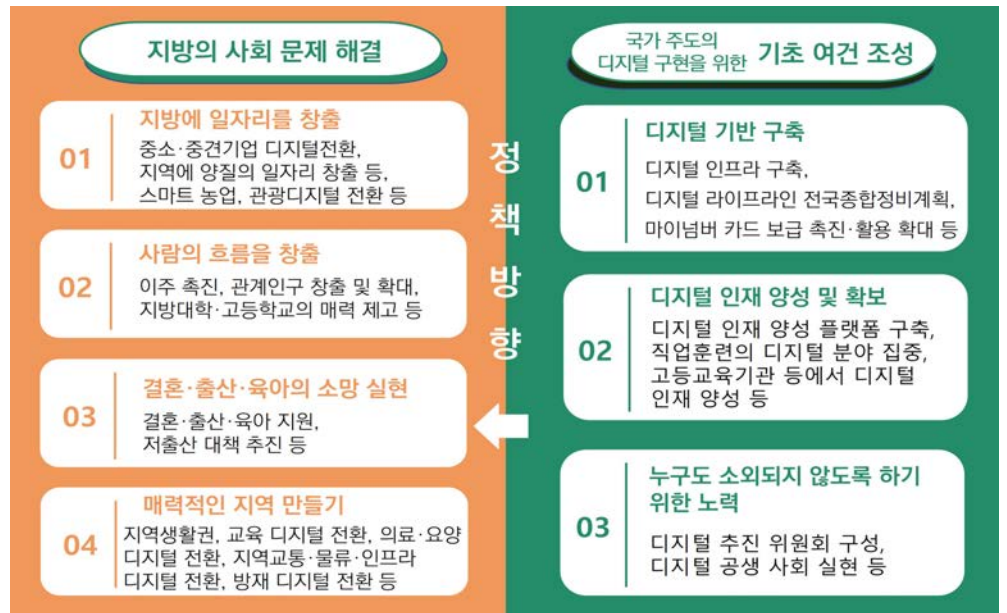
16)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2021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약 3년간 구성되었다.

17) 内閣官房·内閣府,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 2022.

18) 内閣官房·内閣府,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改訂版)」, 2023.

이 종합전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방의 생활·산업·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줄여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해당 종합전략은 기존 지방창생의 네 가지 기본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향,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가 주도의 디지털 구현을 위한 기초 여건 조성으로 ① 디지털 기반 구축, ② 디지털 인재의 양성 및 확보, ③ 누구도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그림 4 일본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 개정판)」 기본 구상



※ 자료: 内閣官房,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 改訂版)の全体像」, 2023.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지방창생 10년 평가,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목표했던 수준의 인구 증가 달성은 미흡, 도쿄 권 일극 완화도 한계 ”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10일 「지방창생 10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¹⁹⁾ 그동안의 지방창생 정책을 평가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 인구 증가라는 성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목표했던 수준의 인구 증가 달성 및 도쿄권 일극 현상 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²⁰⁾

긍정적 평가로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된 지역도 있고, 인구가 증가한 사례도 나타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간의 지방창생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며,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가 한층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은 일본의 소멸위기 지자체 현황을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하였다. 2024년 인구전략 회의²¹⁾에서 2023년에 발표한 일본 장래추계인구(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19)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10年の取組と今後の推進方向」,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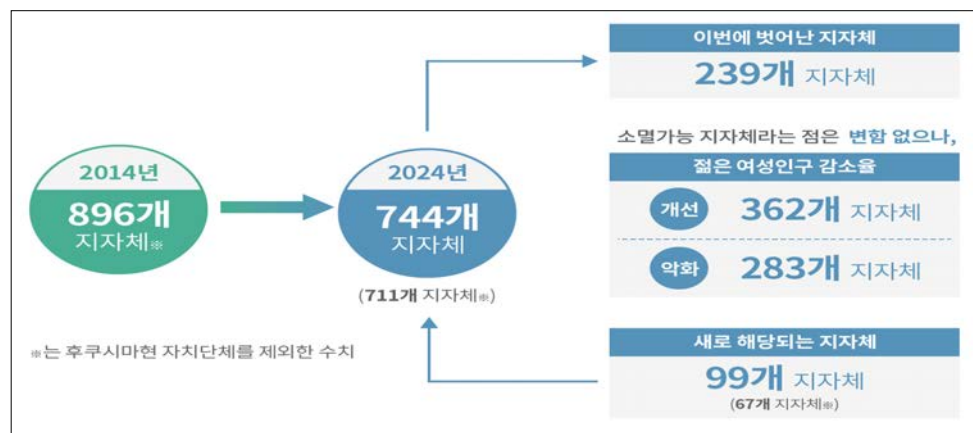
20) 내각관방 지역미래전략본부 사무국(内閣官房 地域未来戦略本部事務局)과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이 운영하는 「지방창생」 홈페이지에는 지방창생 정책 및 회의 결과와 함께 성과 리포트·각종 성과 자료 등이 있다(<https://www.chisou.go.jp/sousei/meeting/chisoudecade/index.html>).

21) 인구전략회의(人口戦略会議)는 민간자문조직으로 2023년 7월~2025년 8월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논의를 했으며, 의장은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부의장은 마사다 히로야(増田寛也)였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²²⁾와 함께 『지방소멸2』²³⁾를 발간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 조사에서는 1,799개의 지자체 중 896개가 소멸 가능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152개가 적은 744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 지역으로 나타났다. 기존 239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 목록에서 빠지고, 99개 지자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소멸가능 지자체라는 점은 변함 없으나, 젊은 여성인구 감소율이 개선된 곳은 362개이고, 오히려 악화된 곳은 283개이다.²⁴⁾

요컨대, 2024년 기준 소멸 가능성 지자체 수가 2014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전반적인 인구 감소 경향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의 경우 신생아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닌 이주자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저출산 기조는 변화가 없고, 2024년도 조사에 이전보다 외국인의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²⁵⁾

그림 5 「소멸 가능성 지자체」 개수의 추이(2014년 대 2024년)



※ 자료: 人口戦略会議, 『地方消滅2: 加速する少子化と新たな人口ビジョン』, 中公新書, 2025, p.15

“
도쿄권은 전체 인구 30% 차지하고, 청년층 진학 취업 위해 유입 계속 증가 중이며, 특히 여성의 이동 현상 뚜렷
”

한편, 부정적 평가로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도쿄권 인구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결과적으로 지역 간의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본의 지역별 인구 분포 특징은 여전히 도쿄권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수도권에 속한 도쿄도와 지바현 두 곳에 불과하며, 일본인만을 기준으로 보면 도쿄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도·도·부·현의 인구를 보면, 도쿄도가 가장 많고, 그 뒤를 가나가와현, 오사카부가 있다. 특히 도쿄권이라고 불리는 4개 지역(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의 인구가 총인구의 29.7%를 차지한다.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未来を選択する会議)’로 후속 조직이 출범해 활동 중이다.

22) 人口戦略会議, 「令和6年・地方自治体「持続可能性」分析レポート」, 2024.

23) 人口戦略会議, 『地方消滅2: 加速する少子化と新たな人口ビジョン』, 中公新書, 2025.

24) 2024년 분석에서는 2014년에 사용한 사회적 증감(이동가정인구)과 더불어 자연적 증감인 봉쇄인구(封鎖人口)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자체별 인구상황의 특성을 4가지 성격의 지자체를 총 9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人口戦略会議, 『地方消滅2: 加速する少子化と新たな人口ビジョン』, 中公新書, 2025, pp.17-18.)

25) 人口戦略会議, 『地方消滅2: 加速する少子化と新たな人口ビジョン』, 中公新書, 2025, pp.15-16.

2009년 이후에도 도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²⁶⁾ 출생과 사망을 제외한 전·출입 등 사회적 인구 이동을 보더라도 도쿄권 집중이 두드러지는데, 일본인 주민의 경우 도쿄권은 29년 연속으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²⁷⁾

2000년대 이후 도쿄권 인구 집중의 특징을 보면, 그 핵심은 도쿄 23구에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는 도내 특별구부라고 하는 도쿄23구와 다마지역(26시·3정·1촌) 및 도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권으로 유입되는 연령대는 주로 15~29세로, 젊은 세대가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해 도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도쿄권은 대기업 본사 및 외국계 기업, 대학 등 교육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층의 취업과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 측면에서는, 최근 젊은 여성의 도쿄도 이동이 남성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Ⅲ

일본 지방창생 2.0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지방창생 2.0 기본 구상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13일 정부는 2034년까지 적용될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지방창생 2.0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강한’ 경제와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성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본·즐거운 일본’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여기서 ‘강한 경제’란 자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돈버는’ 경제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고, 강한 지방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요로운 생활환경’이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일하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매력과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일본·즐거운 일본’은 청년과 여성에게도 선택받는 지방,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개개인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지방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지방창생 2.0은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창생 2.0 기본 구상을 보면,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이 성장력을 유지하면서 도시와 지방 모두가, 성별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즐겁게, 안심·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창생 2.0의 기본 구상 5대 축은 [그림 6]과 같다. 첫째, 안심하고 일하며 살 수 있는 지방 생활환경의 조성이다. 둘째,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지방경제의 조성이다. 이는 지방혁신창생을 구상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과 기업의 지역 분산 추진이다. 이는 산·관·학의 지역 이전, 도시와 지방 교류 등에 의한 창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신시대 인프라 정비 및 AI·디지털 등 신기술의 철저한 활용이다. 다섯째, 광역 지역 연계의 추진이다.²⁸⁾

26) 総務省,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令和7年1月1日現在)」, 2025, pp.10-12.

27) 総務省, 「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 2024年結果」, 2025, p.29.

그림 6 일본 「지방창생 2.0 기본구상」 목표와 5대 정책 축

목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 환경, ‘새로운 일본, 즐거운 일본’	
지방 창생 2.0 기본 구상 5대 축	1 지역에서 안심하고 일하며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	① 청년·여성이 선택하는 지역을 위한 사회·의식 변화 ② 매력적인 근무 방식 및 직장 환경 조성 ③ 지역 애착을 갖고, 활동하는 지역인재 양성 ④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지역사회 실현 ⑤ 미래 지향적 지역 서비스 거점 조성	⑥ 생활필수서비스(교통·의료·요양·육아 등) 유지·확보 ⑦ 미래를 고려한 도시 조성 ⑧ 지역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적 방재체제 구축 ⑨ 지역 치안역량 강화 및 지방 소비자 행정 확충·강화
	2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이는 새로운 지방경제 조성 : 지방혁신창생 구상	① 정책의 신결합 : 다양한 지역자원의 통합적 고부가가치화 ② 인재의 신결합 : 다양한 주체의 연계 통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및 혁신 인재 유치	③ 기술의 신결합 : AI·디지털 기술 등의 조합 ④ 신결합을 전국 각지에서 창출하는 노력
	3 사람과 기업의 지역분산·산·관·학 지역 이전, 도시와 지방 교류 등에 의한 창생	① 정부 관계 기관의 지방 이전 ② 본사 기능의 지방분산	③ 지방에서의 고등교육 충실 ④ 관계인구의 양적 및 질적 향상
	4 신시대의 인프라 정비와 AI·디지털 등 신기술의 철저한 활용	① GX(녹색전환)·DX(디지털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집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디지털·신기술의 사회 실현 ③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5 광역 지역 연계	① 도도부현 경계를 초월한 광역지역간 협력 체계 구축 ② 광역 지방계획 등에 기반한 ‘심리스(seamless) 거점연결형 국토63(‘23년 결정 국토형성기본계획)’ 실현	③ 광역 협력에 의한 인프라 관리 추진 ④ 간선 도로·신칸센 등 간선철도의 교통 네트워크 정비

※ 자료: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2.0基本構想」, 2025, pp.15-28에서 저자가 정리.

지방창생 2.0과 지방창생 1.0 주요 차이점

“ 지방창생 2.0은 축소사 회를 전제, 청년·여성 에 초점, 도시와 지방 간 공 생관계, 신기술 적극 활 용, 지역 간 광역 연계 등이 특징 ”

지방창생 1.0과 비교할 때 지방창생 2.0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창생 1.0에서는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책에 주력했다면, 지방창생 2.0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사회·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적응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즉 인구 감소 하에서도 경제 성장과 지역 사회의 유지·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년과 여성이 선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들의 관점에서 일자리, 생활환경, 커뮤니티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창생 1.0에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나 육아 지원 등을 추진했으나, 지방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직장문화를 개혁하고, 성별 역할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을 바꾸는 등 청년·여성 친화적 지역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지방창생 2.0은 도시와 지방이 서로 의지하며 인재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공생관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일본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지난 지방창생 1.0에서는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지역 간 인구 쟁탈전이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28)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2.0基本構想」, 2025, pp.15-28.

29)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2.0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2025; 内閣官房, “日本列島改造論-地方創生2.0の比較表”,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chihouseisei/pdf/20250613_hikakuhyou.pdf>(검색일: 2026.3.31.); 岩垣京之介, 「地方創生のこれまでの取組と今後の在り方」,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331, 国立国会図書館, 2025.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25~'29년) 주요 내용

“ 5개년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2025~2029년)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환경, 선택받는 지방이란 목표 하에, 331개 시책을 마련

”

넷째, 지방창생 2.0에서는 소프트 사업과 더불어 AI·디지털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방창생 1.0에서는 ICT 활용이나 광대역망 정비 등을 목표로 했으나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창생 2.0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지방경제와 생활환경의 창생을 실현하고자 한다. 예컨대, AI·자율주행·드론 물류·스마트 농업 등 신기술을 지방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서비스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또한 GX(그린 전환) 전략과 연계해 탈탄소형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창생 2.0에서는 자치단체 간 광역 연계로 경제 규모나 사업 규모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창생 1.0 정책에서의 지역 연계는 행정·생활서비스 유지를 위한 협력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 지방창생 2.0에서는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경제권 단위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즉 개별 자치단체 단위(점)에서 벗어나, 광역 블록(면) 단위로 산업·교통·관광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광역 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 간 상호 보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5년 6월 13일 정부가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현 다카이치 내각에서는 2025년 12월 23일 5개년(2025~2029년)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전략은 「마을·사람·일 창생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해서 수립된 기존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2023 개정판)」에 대해, 동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번 지방창생종합전략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생활환경’, ‘선택받는 지방’이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총 331개³⁰⁾를 제시하였다.³¹⁾ 첫 번째 정책 목표인 ‘강한 경제’의 주요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는 2029년까지 도쿄권 이외 지역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을 도쿄권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세부 지표로 ① 지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과 ② 지역 인재의 역량 강화가 있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주요성과지표는 2029년까지 생활 인프라의 질을 유지하고 생활에 대한 안정감으로 인해, 지역 생활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세부 지표로 ① 지속 가능한 생활 인프라의 실현과 ② 지역 생활 만족도 향상이 있다. 세 번째 정책 목표인 ‘선택받는 지방’의 주요성과지표는 2029년까지 도쿄권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청년 및 여성의 인원 및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세부 지표로는 매력 느껴지는 지역조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종합전략에서 국가의 역할 관련 19개 시책도 제시하였다. 주요 지원수단으로 첫째, 인재지원 및 인재육성 정책이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지방창생 인재지원제도에 더해, 2025년부터는 지방창생 동반 지원제도(地方創生伴走支援制度)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가 공무원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3명의 팀을 구성해 담당 시·정·촌의 지역 과제 파악하고 정책 입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³²⁾

30)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331개 시책은 ① 강한 경제(132개 시책), ② 풍요로운 생활환경(118개 시책), ③ 선택받는 지방(62개 시책), ④ 국가의 역할(19개 시책)로 구성된다.

31)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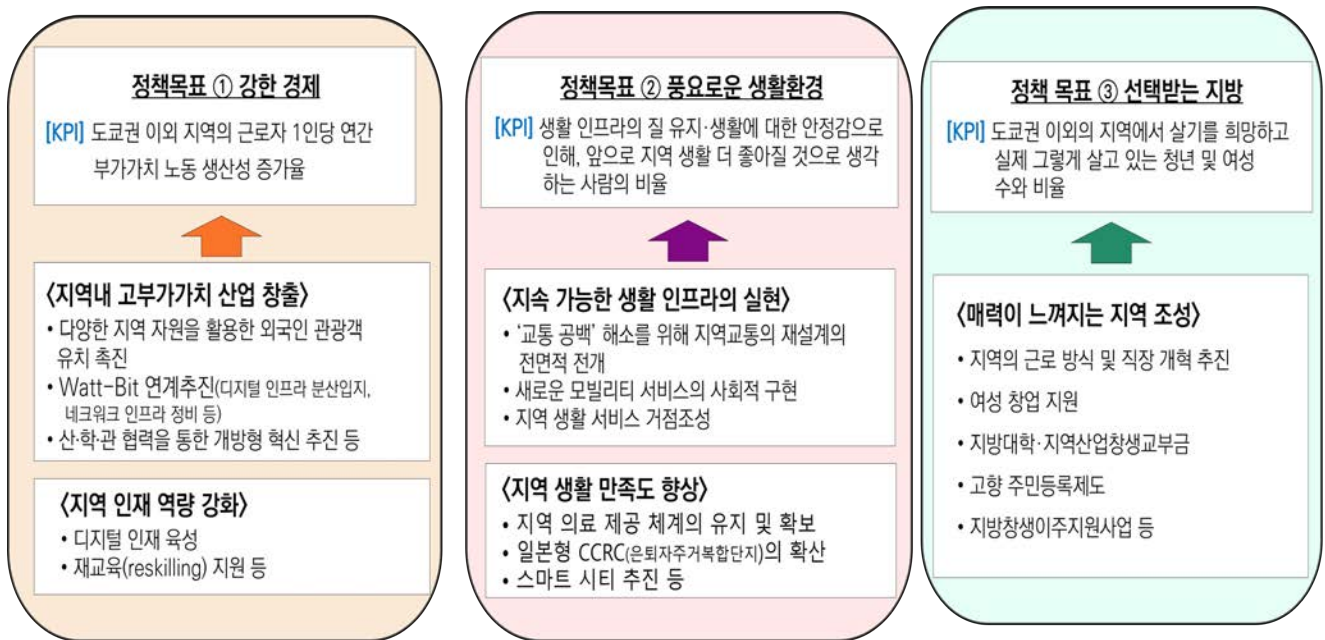
32) 内閣官房, 「地方創生伴走支援制度」, 2025; 内閣官房, “地方創生- 地方創生伴走支援制度”, <<https://www.>

둘째, 정보·디지털 지원 및 디지털 도구 정비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정보·디지털 기반으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과 지방창생데이터 분석·평가플랫폼(RAIDA: Regional Area Information Data Analysis Platform)의 활용이 있다.³³⁾ RESAS는 지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RAIDA는 2024년 1월에 제공을 시작했는데, 지역 과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플랫폼이다.

셋째, 정부의 규제·제도 개혁이 있다. 앞으로 지방 주도의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구 제도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전략특별구역의 추진, 지방 창생특구의 추진 등이 있다.³⁴⁾

넷째, 정부의 재정·금융을 통한 지원이 있다. 재정의 대표적 지원책으로 지역미래교부금 제도가 있다. 지역미래교부금은 지방의 큰 성장 잠재력과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고유의 노력을 계획부터 실행까지 지원한다. 2026년도 지역미래교부금(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지방창생추진사무국 추진) 관련 예산은 1,600억 엔을 책정하였다.³⁵⁾

그림 7 일본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2025~2029년)」의 목표와 주요성과지표



※ 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는 주요성과지표를 의미함

※ 자료: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略~の概要」, 2025, <https://www.cas.go.jp/jp/riesaku/chiikimirai/pdf/20251223_honbun.pdf>(검색일: 2026.4.3.).

chisou.go.jp/sousei/about/banso-shien/index.html(검색일: 2026.4.1.).

33) 内閣官房, 「地方創生データ分析評価プラットフォーム(RAIDA)、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RESAS)による情報支援」, 2026, <https://resas-portal.go.jp/medias-import/A000010_bdt-gaiyou.pdf>(검색일: 2026.4.1.).

34)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 2025, p.83.

35) 内閣官房·内閣府, 「地域未来戦略の推進について」, 2026, p.10.

IV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추진 현황과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이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창생 2.0은 저출산 대책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감소와 생산연령 인구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인구 규모의 축소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응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줄어 197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⁶⁾ 일본에서 활용한 ‘소멸위험지수’³⁷⁾를 적용해 국내 시·군·구에서도 소멸 위험지역을 측정할 결과, 2002년 4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129곳(56.6%)에 이르고 있다.³⁸⁾ 더욱이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일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1.1%, 비수도권은 48.9%를 차지하고 있다.³⁹⁾ 이제는 인구 감소를 불가피한 시대적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축소사회 속에서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여성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둘째, 청년과 여성이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게 종합적인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전입 사유를 살펴 보면, 19~24세 청년 남성은 ‘교육’, ‘직업’ 순으로, 여성은 ‘직업’,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5~29세 청년층에서는 남·여 모두 ‘직업’이 수도권 전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⁴⁰⁾

일본은 지방창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청년과 여성 고용의 질적 및 양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지방창생에 관한 종합전략」에서 청년·여성에게 선택받는 지방 창출을 위해 62개 시책을 제시했다.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① 다양성이 풍부한 지방의 실현(근로방식 및 직장개혁 등 사회변혁 추진,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 등), ② 교육 환경 정비 추진(지방의 고등교육 확충, 인재 양성 추진 등), ③ 도시와 지방의 공생 실현(관계인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청년·여성 지역교류 촉진, 도시 인력의 지방 진출 및 활약 촉진 등), ④ 지방 이주 촉진 등이다.⁴¹⁾ 결국, 지방에서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선택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3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37)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을 통해 측정되며,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된다.

38) 이상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2024.

3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https://jumin.mois.go.kr>>(검색일: 2026.4.1.).

40) 민보경,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5, p.42.

41)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略~」, 2025. pp.62-76.

대안적 인구정책 도입 및 활성화

셋째, 지방에서 상주인구가 아니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교류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인구정책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 지방창생 2.0에서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가 지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인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향 주민 등록'⁴²⁾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반대로 지방 거주자가 도시로 생활거점을 확장하는 '두지역거주'(二地域居住)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⁴³⁾

우리나라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인구'란 새로운 인구개념을 2023년도에 도입했는데,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⁴⁴⁾ 그런데, 체류인구의 포괄적인 산정방식으로 인해 인구를 과대 산정할 우려가 있고, 여전히 지역 간 인구 쟁탈전이란 비판도 있다. 앞으로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산·정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체류하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자격을 부여하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실제 생활하는 지역을 추가 주소지(부주소, 제2주소)로 등록하는 '복수 주소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⁴⁵⁾

지역 간 광역 연계 필요

넷째, 지역 간 광역 연계를 통한 경제권 및 생활권의 확장이 필요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개별 지역이 자립에 필요한 최소 인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 간의 광역 연계를 통해 권역 단위로 지역을 재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일본은 도쿄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지방에서 도쿄로 향하는 인구 이동을 완화시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년 9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전국을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특(제주, 강원, 전북)으로 구분하고, 경제권·생활권·행정권 기반구축을 핵심으로 비수도권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⁶⁾ 한편, 2026년 3월 5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지역 간의 광역연합을 넘어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⁴⁷⁾ 앞으로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더불어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까지 포함한 광역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2) 고향 주민등록 제도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고향 주민'으로 등록함으로써 관계 인구의 규모나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가시화하고, 지역의 주역 확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이다(內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2.0基本構想」, 2025, p.57).

43) 두지역거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은 2024년 5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하혜영,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2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44) 생활인구는 크게 ① 주민등록인구, ②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③ 체류인구(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로 구성된다.

45) 하혜영,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NARS 정책·입법』, 국회입법조사처, 2025, pp.69-72.

46)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2025.

47) 하혜영·류영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24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번역,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 2020~2024」, 2020.
-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2025.
- 민보경,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5.
- 이상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한국고용정보원, 202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 차미숙,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제555호, 국토연구원, 2016.
- 하혜영·류영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24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 하혜영,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NARS 정책·입법』, 국회입법조사처, 2025.
- 하혜영, 「일본 '두 지역 거주' 촉진 정책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2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 하혜영·김유정,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2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https://jumin.mois.go.kr>>(검색일: 2026.4.1.).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 『人口問題研究資料』第347号, 2023.
- 厚生労働省, 「令和6年(2024)人口動態統計月報年計(概数)の概況」, 2025.
- 岩垣京之介, 「地方創生のこれまでの取組と今後の在り方」,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331, 国立国会図書館, 2025.
- 内閣官房・内閣府, 「地域未来戦略の推進について」, 2026.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 ~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 2025.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に関する総合戦略~これまでの地方創生の取組のフォローアップと推進戦略~の概要」, 2025, <https://www.cas.go.jp/jp/seisaku/chiikimirai/pdf/20251223_honbun.pdf>(검색일: 2026.4.3.).
- 内閣官房・内閣府, 「日本列島改造論-地方創生2.0の比較表」,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chihouseisei/pdf/20250613_hikakuhyou.pdf>(검색일: 2026.3.31.).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件走支援制度」, 2025.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 - 地方創生件走支援制度」,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banso-shien/index.html>>(검색일: 2026.4.1.).
- 内閣官房, 「地方創生データ分析評価プラットフォーム(RAIDA)、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RESAS)による情報支援」, 2026, <https://resas-portal.go.jp/medias-import/A000010_bdt-gaiyou.pdf>(검색일: 2026.4.1.).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2.0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2025.
- 内閣官房・内閣府, 「地方創生10年の取組と今後の推進方向」, 2024.

- 内閣官房·内閣府,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 改訂版)」, 2023.
- 内閣官房·内閣府,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 改訂版) の全体像」, 2023.
- 内閣官房·内閣府,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 2022.
- 内閣官房·内閣府,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 改訂版)』, 2020.
- 内閣官房·内閣府,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 2019.
- 内閣官房·内閣府,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について」, 2014.
- 人口戦略会議, 「令和6年・地方自治体「持続可能性」分析レポート」, 2024.
- 人口戦略会議, 『地方消滅2: 加速する少子化と新たな人口ビジョン』, 中公新書, 2025.
- 総務省, “関係人口”,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about/index.html>> (검색일: 2026.3.27.).
- 総務省, 「住民基本台帳に基づく人口、人口動態及び世帯数(令和7年1月1日現在)」, 2025.
- 総務省, 「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 2024年結果」,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자 |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선임연구관, 행정학박사
02-6788-4563 hahy21@assembly.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615-14
ISSN 2586-565X